

월/요/광/장

김용기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 글로벌 스탠다드이다. 이 말에는 국제적 변화의 흐름을 좇지 않으면 낙오되기 십상이라는 긍정적 문제의식이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오용하고 남용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본래 국제기준 혹은 국제표준을 말한다. '국제환경기준(글로벌 그린스탠다드)' '국제노동기준(글로벌 레이버스탠다드)'은 건강과 삶에 영향을 끼치는 환경과 노동 분야의 최소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제품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규격과 방식의 표준을 정하고 있다. 후호분할다중접속(CDMA) 방식과 유럽의 이동통신시스템(GSM)이 이동통신 분야의 국제표준이다.

하지만 단지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나라의 정책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간주하고 이를 준수해야 할 것대로 간주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했다. 기업부채비율 상한선 200%와 은행 자기자본비율 8%를 지방은행에게까지

적용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공정거래법에 부채비율을 200%로 결정된 배경이 재미있다. 외환위기 직전 한 국기업의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이 400% 정도였는데 미국기업의 부채비율은 160% 내외였다. 그래서 미국 평균보

'글로벌 스탠다드' 오용과 남용

다 높지만 반으로 잘라 200%로 부채비율을 제한했다. 정책 결정에 참여한 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다.

기업이 자기자본과 차입금을 어떤 비율로 섞느냐는 것은 리스크 감수능력과 의지, 해당 산업의 비즈니스 사이클 등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그런데 이를 공정거래법 상 규정으로 집어넣고 이를 1999년 말까지 맞추도록 시한까지 정했다.

글로벌 스탠다드 아닌 스탠다드를 정책으로 강요한 결과, 살아남은 기업은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차입금 이자 지출이 줄어들어 수익성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기업들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비주력기업 뿐 아니라 당장 현금화가 가능한 유망 주력기업을 팔아치우는 일이 벌어졌다. 현재 국내에서 1조원 이상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외국기업 중 상당수는 정책 시행 당시 전도 유망했지만 현금 유동성의 확보를 위해 외국자본에 매각한 기업들이다.

부채비율을 줄이려는 정책은 2001년 더욱 강화되었다. 부채비율 100% 미만의 기업집단을 총체적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으로써 부채비율 100% 이하로 재무구조를 바꾸려는 정책을 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상장 제조업 법인의 부채비율은 79.1% 다. 2004년 말 미국제조업의 14.2%보다도 낮다. 재무구조가 지나치게 건전하다는 것은 기업이 외부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보수적 경영을 한다는 의미이다. 부채비율이 낮으면 자본비용이 높아져 목표 수익률을 높게 잡게 되고 투자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해 국제기준으로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가 적용되었다.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에도 이 기준을 적용했고 심지어 중소기업과 저축은행까지 장려

했다. BIS비율 8%라는 것은 국제업무를 하는 은행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외환위기 당시 해외지점을 보유하지도 않은 지방은행까지 이 비율을 적용하고 단기간 내에 준수하지 못하면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은 당시의 정책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남용한 것이었다.

일본은 1998년부터 BIS 비율을 강제 적용했지만 해외지점과 법인을 갖지 않은 은행은 국내기준(BIS비율 4%)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1998년 일본 전체 148개 은행 중 45개만이 BIS비율 8% 기준을 적용받았고 2003년에는 17개로 줄어들었다. 해외투자자본이 인수한 국내 은행은 중소기업대출을 회수해버리고 나서 BIS 비율이 14%에 이르기 때문에 글로벌 수준의 은행이 되었다는 여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은행이 자기자본만큼만 대출을 한다면 BIS 비율은 100%로 올라가겠지만 이 은행은 자산 부족으로 인해 문을 닫아야 한다. BIS 비율은 최소한도의 기준일 수는 있어도 높을수록 좋은 국제규범은 아닌 것이다. 은행이 BIS비율을 맞추기 위해 보유 주식을 내놓음으로써 1998년 주가가 더욱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도 국제표준을 잘못 적용한 데서 비롯된 현상이었다.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 설

목포신항 기아차 선적 거부 정부가 나서라

목포 신항만(주)의 기아차 광주공장 수출 차량 선적 거부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목포 신항만은 선적료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15일부터 6일째 기아차 선적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항만 측은 선적료 조정에 이견을 노출한 채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목포 신항만의 기아차 선적 거부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당사자인 정부가 적극 나서서 것이다. 목포 신항만은 부두 건설 당시 정부와 '화물 1t 처리시 5천500원을 받는 것으로 본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12t) 대당 선적료는 6만6천원이나 현재 1만7천원 정도다. 4만9천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목포 신항만 측은 지난 2004년 개항 이후 현재까지 자동차 50만대 이상 선적에 따른 누적적자가 200여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동량이 늘면 수익이 나야 하는데

반대로 손해를 보는 현행 선적료 협정은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 따라서 정부가 목포 신항만의 선적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선적료 조정은 전적으로 정부와 신항만 간의 문제다. 그럼에도 아무 관련이 없는 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날이면 날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외치고 있는 실용 정부로서는 아니겠는가.

선적거부라는 실행사부터 돌입한 목포 신항만 측도 문제다. 더욱이 부지 사용 계약기간이 올 연말임에도 기아차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지역경제와 기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선적 거부를 당장 철회하고 선적료 문제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순리다. 정부와 목포 신항만은 기아차가 수출주력 항을 다른 항으로 옮기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적료 협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첫 우주인 탄생 우주개발 본격화 계기로

광주 출신의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 씨가 우주비행을 마치고 무사히 귀환했다. 이씨를 태운 러시아 우주선 소유스 TMA-11호가 지난 19일 오후 카자흐스탄 북부 우르스크에 착륙한 것이다. 이씨의 우주비행 성공을 축하한다.

12일에 걸친 '우주 대장장'의 의미는 매우 크다. 우리나라는 세계 36번째 우주인 배출국이 됐고, 이씨는 세계 475번째 우주인이자 49번째 여성 우주인으로 기록됐다. 우리나라가 우주 개척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된 것이다.

이번 우주비행의 성공을 과대 포장할 필요는 없다. 엄밀히 말하면 러시아 우주선의 한 자리를 빌려 이씨가 우주에 첫 발을 내디딘 것에 불과하다. 미 항공우주국(NASA)이 이씨를 우주비행 참여자(spaceflight participant)로 분류하면서 우주인이나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260억원의 세금을 들인 우주관광'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우주개발에 본격

적으로 나설 것을 전 세계에 알린 신호탄인 점만은 분명하다. 전국 안방에 생생하게 전달된 이씨의 우주일주 수행 모습은 우주를 일부 선진국의 전유물로만 여겨온 국민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우주개발과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도 됐다.

정부는 2015년까지 세계 10위권의 우주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 아래 항공우주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고층 나로 도우주센터도 올해 완공된다. 오는 12월 나로도우주센터에서 한국형 소형 위성발사체에 자력으로 개발한 과학기술 위성 2호를 실어 쏘아 올리면 우주개발 역사에 새 장을 열게 된다.

한국인 첫 우주인 배출은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일회성 행사나 과학 대중화 이벤트로 끝낼 수는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학계 및 기업과 협력해 우주개발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세우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 바란다.

無 等 鼓

인류와 바이러스는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왔다. 인류가 승리할 때도 간혹 있었지만 승리는 거의 바이러스 쪽이었다. 인류사에 가장 치명적 영향을 끼친 바이러스는 천연두. 기원 전 1160년 사마탄 이집트 파라오 람세스 5세의 미라에서 얼굴과 목 등에 곰보 자국이 확인됐다. 천연두로 사망한 것이다. 콜럼버스의 항해 이후 유럽에서 건너간 천연두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95%를 몰살시켰다. 이를 본 유럽의 정복자들이 "신이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땅을 청소해주셨다"고 했을 정도였다.

천연두는 인류에게 정복된 몇 안되는 바이러스라는 기록을 남겼다. 1798년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가 '종두'라는 백신을 만들어내면서 몰락한 것이다. 1977년 이후 지구상에 새로운 천연두 환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은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고대 민주주의의 황금기를 구가했던 아테네의 몰락은 경쟁도시국가 스파르타가 아니라 흉역 바이러스 때문이었다. 1980년대 초, '현대판 흑사병'이라 불리는 에이즈가 등장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고개를 들었다. 이후 세계는 들도 보지도 못한 말한 이집트 파라오 람세스 5세의 미라에서 얼굴과 목 등에 곰보 자국이 확인됐다. 천연두로 사망한 것이다. 콜럼버스의 항해 이후 유럽에서 건너간 천연두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95%를 몰살시켰다. 이를 본 유럽의 정복자들이 "신이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땅을 청소해주셨다"고 했을 정도였다.

천연두는 인류에게 정복된 몇 안되는 바이러스라는 기록을 남겼다. 1798년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가 '종두'라는 백신을 만들어내면서 몰락한 것이다. 1977년 이후 지구상에 새로운 천연두 환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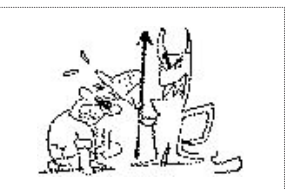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은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고대 민주주의의 황금기를 구가했던 아테네의 몰락은 경쟁도시국가 스파르타가 아니라 흉역 바이러스 때문이었다. 1980년대 초, '현대판 흑사병'이라 불리는 에이즈가 등장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고개를 들었다. 이후 세계는 들도 보지도 못한 말한 이집트 파라오 람세스 5세의 미라에서 얼굴과 목 등에 곰보 자국이 확인됐다. 천연두로 사망한 것이다. 콜럼버스의 항해 이후 유럽에서 건너간 천연두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95%를 몰살시켰다. 이를 본 유럽의 정복자들이 "신이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땅을 청소해주셨다"고 했을 정도였다.

천연두는 인류에게 정복된 몇 안되는 바이러스라는 기록을 남겼다. 1798년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가 '종두'라는 백신을 만들어내면서 몰락한 것이다. 1977년 이후 지구상에 새로운 천연두 환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은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고대 민주주의의 황금기를 구가했던 아테네의 몰락은 경쟁도시국가 스파르타가 아니라 흉역 바이러스 때문이었다. 1980년대 초, '현대판 흑사병'이라 불리는 에이즈가 등장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고개를 들었다. 이후 세계는 들도 보지도 못한 말한 이집트 파라오 람세스 5세의 미라에서 얼굴과 목 등에 곰보 자국이 확인됐다. 천연두로 사망한 것이다. 콜럼버스의 항해 이후 유럽에서 건너간 천연두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95%를 몰살시켰다. 이를 본 유럽의 정복자들이 "신이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땅을 청소해주셨다"고 했을 정도였다.

천연두는 인류에게 정복된 몇 안되는 바이러스라는 기록을 남겼다. 1798년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가 '종두'라는 백신을 만들어내면서 몰락한 것이다. 1977년 이후 지구상에 새로운 천연두 환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바이러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기 고



김재이

최근 혁신도시 건설 사업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논쟁의 요지는 혁신도시의 경제효과가 부풀려져 있으며 이전 대상 공기업이 민영화될 경우 혁신도시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공기업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 정책은 재검토,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혁신도시 건설 관련 논란이 뜨거워지자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혁신도시 건설 추진의 당초 취지가 훼손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광주와 전남의 공동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공

의 해양수산·금융·영화, 강원도의 광업·진흥·의료·관광 등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적으로 특화된 발전전략을 추구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셋째,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경제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수도권과의 과밀화와 지방의 낙후지역을 해소해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합의를 통해 채택한 정책이었다.

넷째, 문제점 없이 완벽한 순기능만 갖는 정책은 없다.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기 폐기처분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혁신도시 건설 훼손돼선 안된다

동혁신도시라는 모델을 창출한 양·사·도민은 이러한 일련의 진행 상황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낙후된 지방에 최소한의 성장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몇 가지 논리에 의해 재단되고 취지가 훼손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주요 쟁점사항을 정리해 본다.

첫째, 혁신도시는 단순히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거, 공공, 녹지, 상업기능이 복합된 고품격의 명품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다. 혁신도시 조성원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여타의 주택단지나 신도시보다 높은 녹지 비율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한 토지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혁신도시의 경제성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둘째,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각 지역별로 특화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발전전략을 구체화한 것이지만 단순한 나뉘먹기 사업은 아니다. 광주·전남의 에너지·농업·정보통신·문화관광, 부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다행스럽게 정부가 혁신도시 계획을 계속 시행하되 보완책을 강구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당초 취지가 훼손되거나 축소돼 추진될 경우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은 크게 훼손될 것이다.

다섯째, 토지 보상이 90% 이상 진행된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 및 공기업 민영화 추진 정책과 연계해 발전적 대안을 찾으려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 그러나 국토균형 발전과 연계해 극도로 피해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전력과 같은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정책에 의해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이 훼손돼서는 안 될 것이다. <동신대 교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육성포럼 대표

방범용 CCTV 사후 관리가 더 중요

CCTV가 강력범죄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곳곳에서 CCTV 설치가 크게 늘고 있다.

방범용 CCTV는 범죄를 미리 막자는 취지에서 설치하는 것인데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인력이 부족해 사실상 범죄 예방보다는 범죄가 발생후 범인 식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또 허술한 사후관리를 고장 나거나 일부 영상자료가 누락되어 필요 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예산 문제로 설치하는 지자체가,

관리는 경찰이 하는 이원적 구조로 인해 CCTV가 적재적소에 설치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CCTV의 통합 관리절차도 요구되는 이이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공인·놀이터 등에 1만3천303여개의 CCTV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한다.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하는 만큼 적재적소에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기대한다.

▲인터넷 독자 chonny83@naver.com

기 고



최현주

전통적으로 생산의 터전이었던 땅은 건물이 들어서거나 농작을 하여 재산을 증식시키는 재물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영향으로 광주 도심 속의 유희 부지에는 어김없이 아파트·상가 건물들이 들어서곤 했다.

그러던 광주가 민선 3기 이후 '2015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맑고 푸른 생태도시 건설'이라는 좌표를 설정하고 2005년부터 '1000만그루 나무심기'를 대대적으로 펼치면서 땅을 자연에 돌려주기 시작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전환을 시작한 것이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은 그간의

주민이 참여하여 성공을 거둔 좋은 사례이다.

지금 광주의 빛고을로와 기아로, 광주역 앞 등 도로 곳곳에서는 진분홍 꽃잔디 물결이 도심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 잔디의 역할을 하면서 꽃으로 특색있는 광주를 표현하는 이 작은 식물들은 시민들의 표현 봉사로 심어지고 있어 더욱 값지다.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1천7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광주의 관문인 기아로 등에 꽃잔디와 패랭이 115만본을 심었고, 올해도 동림IC, 광산IC 등지에서 2만6천여본을 심을 계획이다.

꽃물결을 가꾸는 자원봉사의 마음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광주역 앞 등 65개소에 조각 숲을 조성했고, 동명중학교 등 공공기관 34개소의 담장을 허물고 나무를 심었으며, 공원 산책로와 가로변에는 녹음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또 도심 곳곳에 녹음이 우거진 휴식터를 만들기 위해 구 전담도청 옆 경찰청차고지에 소공원과 옛 국정원 부지에 공원을 조성했다. 옛 한국은행 부지에는 금남로공원을 만들고 옛 전남도지사 공관에 상록공원, 동문로변의 시립도서관 앞에 우산공원 조성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했다.

이같은 '10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 성과는 광주 시민의 관심과 노력으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2007년에 대통령령을 수상한 폐선부지 푸른길 공원 조성 사업(조선대 정문~광주역·7.9km 구간 추진중)은 시민단체와 지역 기업,

3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여덟명이 8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햇볕에 그을린 얼굴로 온종일 주그리고 앉아 꽃잔디를 심고 있다. 투철한 봉사정신이 없이는 엄두도 못 낼 나무심기의 중노동이다. 자원봉사는 허울 과시가 아닌 내 고장을 아끼고 가꾸는 마음을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인이다.

어머니와 누이의 마음으로 꽃잔디를 가꾸어가는 봉사자들의 모습에 잔잔한 감동의 물결이 젖어든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궈가는 푸른 나무와 진분홍 꽃잔디가 아름다운 광주가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다.

빛고을 광주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생태도시로 만들기 위해 1000만그루 가꾸기와 꽃잔디 심기에 가까이 동참해 주신 많은 시민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드린다.

<광주시 환경녹지국장>

보건소에도 '헌혈 시스템' 갖춰야

지난 일요일 동생과 함께 교회에 갔는데 교회 게시판에 "백혈병으로 위중한 환자가 있으니 헌혈이 같은 분은 헌혈을 해주시고, 아닌 분은 헌혈증서를 보내 도와주면 감사하겠습니다"는 긴급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필자와 동생의 헌혈행이 맞아 헌혈을 하기 위해 인근 보건소를 찾았다. 그런데 보건소에는 헌혈한 피의 보관 시스템이 없어 헌혈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시에서는 헌혈차가 있어 쉽게 헌혈을 할 수 있는데 의료기관 보건소에서 할 수 없다는 아쉬웠다.

백혈병같은 악성 혈액질환자들은 독성이 강한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받고 또 질환

자체의 영향 때문에 지혈작용을 하는 혈소판이 줄어들어 코피나 혈뇨·혈변을 자주하게 된다고 한다.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이 혈소판인데 혈소판은 일반헌혈과 달리 성분헌혈을 통해 추출한다.

하지만 성분 헌혈은 일반 헌혈과 달리 피에서 성분을 빼내후 다시 헌혈자의 몸에 피를 되돌려 넣는 방식이라 일반인들이 꺼리고, 그러다보니 혈소판 보유량이 적다.

가끔 언론에서 피가 모자란다고 한다. 매년 군인이나 학생들의 자원봉사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가까이서 항상 헌혈을 하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한다.

▲정영철·목포시 연산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경영지원국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2200-511
편집부	2200-629	문화체육부	2200-626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 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경정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액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